



눈으로 뒤덮인 한리산 정상부와 영실분화구 2일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바라본 한리산 정상부와 영실분화구가 며칠째 내린 하얀 눈으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신년 기획 '위기극복, 제도약 2021년' / <1> 코로나19 방역

“방역 뚫리면 제주경제 회복 어렵다”

산발적 확진자 속출로 방역체계 흔들·지역경제 위기도 “관광업계·소상공인 등 지원 민생경제 활력 주력”

지난해 예고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쇼크로 제주도는 큰 혼돈과 불평을 겪었다. 올해도 워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가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정체나, 발전이나'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때문에 제주도정과 지역사회의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시작으로 제2공항, 4·3특별법, '송악산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주제로 5회에 걸쳐 분야별로 올해 정책 및 지역사회의 대응 방향을 진단·제시한다.

▶심상찮은 확진자 속출... 제주사회 위협=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라

산발적 확진자 속출로 방역체계 흔들·지역경제 위기도 “관광업계·소상공인 등 지원 민생경제 활력 주력”

▶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최우선 순위”=원희룡 제주지사는 신년 대담에서 “올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도민 안전이라는 바탕 위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방역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를 본격 활용하고, 제주형 뉴딜정책 계획을 통해 미래 제주를 이끌어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가 집중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 유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올해 손소독제, 마스크, 열감지기, 소독기 등의 방역물품·기기를 비롯해 공공시설물의 방역비용 등 예산 12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에 앞서 최근 재해구호기금에서 40억원을 선투자해 생활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체 예산은 160억원 규모다. 지난해 전체 방역비용은 150억원으로 모두 예비비에서 집행했다. 도는 이와 별개로 예비비 지출을 통한 의료진의 인건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통일하고, 도와 행정시에 배정해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재난지원금 제공 여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 연장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워크숍·회식 등 금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유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 조치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연장은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극 동참 ▷격상 핵심 지표인 한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지난 해 12월26일~이달 1일)는 8.57명으로 2단계 기준(10명)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는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가족(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함),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또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금지,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기존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연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 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돼 적용된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과 함께 현장 맞춤형 조치가 취해진다. 점점방 형태이나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폐·밀집)의 특성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준해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 조치가,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시음 금지 사항이, 읍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 된다.

이태원기자 lty9456@ihalla.com

‘제라진 안심식당’ 193곳 첫 지정 제주시, 음식물 덜어먹기 확산·코로나19 방지 차원

코로나19로 식당에서 여럿이 함께 식사할 때 ‘음식물 덜어먹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시가 ‘제라진 안심식당’ 193곳을 처음 지정했다.

제주시는 지역내 일반음식점 중 2021년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작년 10~11월 중 평가를 거쳐 최종 277개소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점의 위생상태, 시설기준, 원재료의 보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업소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 식당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식물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제공 등 식사 문화개선 과제를 실천하고, 업소 내 방역 관리가 우수한 193개소는 ‘제라진 안심식당’으로도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또는 종량제 봉투 지원, 시설개선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 우선 지원, 모범음식점 간판 설치가 지원된다. 제라진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업소에는 개인용 집게 등 식문화 개선용 물품이 지원된다. 또 시는 1월까지 제라진 안심식당 신청기간을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뿐 아니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업소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정보는 제주시 위생관리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들 모범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관리 등을 통해 품격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라진 안심식당 추가 신청 문의는 728-2623.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그린·디지털뉴딜 선도도시’ 탄력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 2년간 100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뉴딜정책과 맞물린 정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그린·디지털뉴딜’ 선도도시로서 인정받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공사 연계 R&D 신규 과제 공모에서 제주의 ‘수소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이러 환경부의 그린뉴딜 5대 주요 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문체부·과학기술부)에서 ‘귀하고, 좋고, 함께 하는 제주 Smart - Green GO+’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용천수는 귀하게, 폐기물은 중량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그린 제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100억원을 투자하여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용천수와 자생종을 활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체험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중량제(압축) 시범사업과 쓰레기 배출 수거 과정을 최적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